전북자치도, 중기 규제혁신 '가속도'

중기 옴부즈만과 협약 맺고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 개최
도내 경제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추진 · 지역 맞춤형 기업지원 강화

11일 전북도청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도내 중기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1일 도청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전북도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규제 정보 공유 △공동 조사 및 발굴 △규제 해소 홍보 및 협업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독립적 정부기관으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립적 중재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자치도와 옴부즈만이 협력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우리 전북은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된 만큼,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에 도 앞장서겠다"며, "최승재 옴부즈만과 함께 전북자치도만의 차별화된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옴부즈만도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해 전북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규제컨설팅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약 체결 후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이한형 옴부즈만지원단장,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비롯해 도내 중소기업 대표,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전북 숙박시설 도로 경계 이격거리 완화 △새만금 공유수면 부지사용료 이중부과 개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요건 완화 등 10개 규제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펫푸드 업종 제한 해제 등 전북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들도 논의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오늘 논의된 규제 개선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옴부즈만과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규제·애로를 옴부즈만이 맞춤형 규제컨설팅을 통해 지원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발돋움하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생활 미세먼지 저감사업 확대 추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 세탁소 VOC · 도로 청소 · GHP 장치 대상

전북자치도가 대기환경 개선과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생활 밀착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 △소규모 세탁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사업 △도로주변 미세먼지 저감사업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올해 취약계층과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폭넓게 보급하여 질소산화물 및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한다.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인증 LNG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가구당 최대 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하며, 지난해 1,057대에서 올해는 1,540대로 확대 보급한다.

특히, 기존 다자녀가구의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70%에서 100%로 완화하였으며, 도시가스(LNG)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친환경 LPG 보일러 교체 지원도 새롭게 추가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소규모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 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올해는 전주, 군산, 익산, 순창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친환경 세탁기 3대와 친환경 워터클리닝 공법 4개소를 보급한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건물에서 사용하는 가스 냉난방기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부착해 배출량을 줄이는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보급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올해 총 240대의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를 지원하며, 사전 점검부터 저감장치 부착, 성능 확인, 사후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관리해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도-시군, 물가안정 대책회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한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1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군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군 물가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지역 경제동향 및 물가 전망을 발표하고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 방안 △착한가격업소 확대 운영 △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등이 논의됐다.

전북자치도는 공공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국 평균 요금과 비교해 인상폭을 낮추거나 인상 시기를 분산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요금 인상 결정 시 원가 분석 용역을 거쳐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인상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 대책으로 현재 414개소인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489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며 기존 85만 원이던 지원금을 110만 원으로 증액하고 시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공모 신속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착한 가격업소 이용 주간' 운영, 공공기관 구내식당 휴무일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장려 등 홍보 활동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객 바가지요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 지도·점검도 강화하고, 부당 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추진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도, 청년 유출 대응 총력… 일자리 · 주거 · 문화 종합대책 추진

도-전북연구원-유관기관, TF 첫 회의 개최… 청년 유출 · 입 대응 방안 모색

11일 개최한 전북특별자치도 가칭 '청년 유출·입 대응 전담팀(TF)' 킥오프(Kick-off) 회의 모습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일자리부터 주거, 문화에 이르기까지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 청년층(18~39세)은 2024년 기준 38만 5,523명으로, 전체 인구의 22.2%를 차지하지만 최근 3년간 평균 약 1만3,000명씩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청년 인구 전입은 2만6,844명, 전출이 3만5,322명으로, 순유출 인원만 8,47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심각한 감소세에 따라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11일 '가칭) 청년 유출·입 대응 전담팀(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갖고 청년 유출을 차단하고, 청년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전북자치도는 청년유출·입 대응 TF를 구성하고, 전북연구원과 경제통상진흥원 등 유관기관, 도내 23개 부서와 협력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 및 추진키로 했다. TF는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복지, 참여·권리 등 6개 분과로 운영되며, 청년층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핵심 분야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TF는 우선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내집 마련 지원 △문화·복지 향상 △청년 참여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전북연구원과 협력해 청년 유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정책화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산대학교 이국용 교수가 청년 유출 원인 분석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언했으며, 전북연구원은 좋은 일자리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또한, 분야별 분과위원회 운영 계획이 논의되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협력 방안이 구체화됐다.

앞으로 전북자치도는 TF를 중심으로 각 분과별 연구와 정책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간담회와 포럼을 운영하고, 청년 정책 참여단과 협력해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올해 2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을 확정한 후, 내년도 예산과 연계해 실질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낼 예정이다.

도 천영평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층의 지속적 유출은 전북의 심각한 문제"라며 "청년들이 전북에 정착하고, 더 나아가 외부 인재도 유입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JS1 22개 · JS2 45개 · JS3 4개사 선정… 내달 14~18일 신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촉진할 '2025년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오는 4월 18일까지 모집한다.

이에따라 △JS1(기초 수준) 22개사 △JS2(기초 이상) 45개사 △JS3(중간 이상) 4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모집에 앞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과 함께 오는 3월 13일(수)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한편, 사업 신청은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 공 고 -

밀양박씨 이정공파 종중 총회

밀양박씨 이정공파 중중 총회를 알리고자 합니다.

#일시 : 2025년 3월 22일 오전 11시
#장소 : 티하우스레몬(서울 강남터미널 2층) / 중식(시래마을)

- 안 건 -

● 결산 보고 ● 감사 보고
● 부동산매도건 ● 종중규약변경건
● 기타 안건

밀양박씨 이정공파 종중 회장 박철진